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

관세가 아니다! 이제는 탄소국경세!

국가적 차원에서 대표적인 움직임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이다. 2019년 EU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유럽 기후 법안을 발표했으며, 2023년부터 탄소 과다 배출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탄소국경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게 되면 글로벌 가치 사슬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 예견되기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 국가 무역에서 중요한 것이 관세였다면, 이제는 탄소국경세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세계 각국이 하나둘씩 탄소중립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우선 미국은 바이든 당선 이후 앞서 화석 연료 장려정책을 펼치던 트럼프와 달리 미국 내 '탈(脫)탄소'정책을 강화하며 2035년까지 탄소 배출 발전 시설 중단, 친환경 재생에너지 도입 추진 등을 통해 2050년까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약속했다. 세계 제1의 탄소 배출 국가인 중국은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 세계 경제 대국들이 속속 탄소중립 선언을 단행하며 2021년 기준 전 세계 경제 규모의 3분의 2가 넘는 국가가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다.

비재무 정보 공시 의무화 사회로의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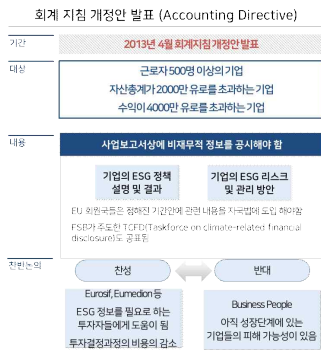


그림 9 회계지침 개정안 발표

로 인해 근로자 500명 이상의 기업들이 사업 보고서상에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근로자 500명 이상의 공 entity) 혹은 통합공익실체 interest entity)들은 경영 보고서에 를 반드시 포함하거나 별도의 보고서는 환경, 사회와 고용 문제, 인권, 반 사업체의 비즈니스 모델, 관련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 리스크, 비재무적 실적 지표 등의 내용이 공시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의 ESG 정보 공시 의무화에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다. Eurosif(유럽의 사회책

EU(European Union, 유럽 연합)는 이러한 ESG 트렌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유럽에서는 2006년부터 비재무적 정보 공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EC(유럽위원회)는 2013년 4월에 회계지침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회계지침에서는 EU법의 한 형태로, EU 회원국들이 달성해야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새로운 지침의 제정 혹은 기존 지침의 개정 사안이 있을 경우 회원국은 위 내용을 자국법에 도입해야 한다. 회계지침 개정안으로

“사업 보고서상에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의 실제(public interest consolidated public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문서를 발간해야 한다. 보고서에 부패와 청렴에 관한 내용과

임투자포럼)와 EUmedion(네덜란드 지배구조포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등의 단체들은 ESG와 같은 비재무적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의 투자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의를 표했다. 반면 BusinessEurope(유럽경제인연합회)은 비재무 정보 공시 의무화가 아직 성장 중인 기업들에게 CSR 활동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비재무적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며 EC(유럽 위원회)는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의 수가 2,500사에서 18,000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EU 내 각 국가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를 위한 노력 또한 상당하다.

일부 EU 회원국들은 자국의 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도로는 스웨덴, 스페인, 덴마크 Guidelines for External State-Owned Companies, Act, Danish Financial 재무적 정보 공시를 법과 제비재무적 정보 공시 대상의 를 보이는데, 스페인과 스웨 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있는 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유럽 국가 ESG 정책 동향

국가	관련법	세부 내용
네덜란드	Dutch Civil Co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적 정보를 비롯한 환경, 근무자, ESG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함 상장·비상장기업 모두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가 있음 이사할당제(gender quotas)가 도입됨
스페인	Sustainable Economy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state-owned companies)은 매년 지배구조 보고서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해야 함 대기업은 2015년부터 이사회 내 다양성을 각각 40%로 맞춰야 함 (권고사항)
스웨덴	Guideline for External Reporting by state-owned Compan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은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해야 함(환경, 인권, 사회적 다양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야 함) 지속가능보고서는 제3자로부터 검증될 수 있어야 함

그림 10 유럽 국가 ESG 정책 동향

법에 EU법에서 규정한 내용 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 크가 있으며, 각각 Reporting by Sustainable Economy Statement Act를 통해 비 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위와 세부 내용에는 차이 덴은 공기업만이 비재무적 반면, 덴마크는 상장기업만

유럽 그린딜

유럽 그린딜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EU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전방위적 로드맵이다. 사회 전 분야를 전환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이며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산업, 건축 등 6개 분야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U는 2020년 1월 유럽 그린딜 투자 계획을 발표하여 유럽 그린딜 추진을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를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며 민간과 공공 부문의 투자 Framework를 구축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또한 2020년 3월 유럽 기후 법안을 발표하여 유럽 그린딜의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법제화하였으며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50~55%로 상향 조정하였다.